

팩스 아시아나가 태동하고 있다.¹ 동북아시아 한중일 3국의 세계 무역 비중은 세계 시장 전체의 15%(표1.1)로 거침없이 성장 중이다. 역동적인 경제주체로 성장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은 3국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매우 크게 공감한다. 이에 ASEAN+3, 한중일 FTA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학계와 국정을 넘나들며 나오고 있으나, 3국의 걸음마는 아직 유아기 단계 수준이다.

본디 아시아 지역은 여러 측면에서 지역주의가 등장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인종, 문화, 언어가 혼재하고 경제적 수준 역시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공통의 관심사나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어렵다. 그 중에서도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 존재하는 역사적 갈등관계, 즉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경험과 이에서 비롯된 영토 분쟁은 지역 통합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다.² 이처럼, 한중일 3국이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까닭은 동북아시아 내에 복잡하게 얽히고 얽힌 역사적 잔재를 아직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동적인 미래를 위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과거의 청산은 통합에 있어 최소한의 전제다.³ 그리하여, 우리 SONAS 10은 동북아시아권 내의 역사적 인식을 바로 잡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한중일 3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환동해 경제권을 제안하여, 동북아시아 내 신지역주의를 선언하고자 한다.

1. 유라시아-환동해 공동체의 자격 요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아시아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표.1.1) 그리고 러시아의 통합을 제안한다. 동북아시아 권역에 들어가지만, 경제 규모 면에서 다른 나라들과 차이를 보이는 몽골이나 북한⁴, 중국에 귀속되어 있는 홍콩⁵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최근 친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만⁶도 완전한 독립 회원국으로 인정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구분	1998년	2000년	2007년
한, 중, 일	1,324(12.1%)	1,785(13.8%)	4,236(15.1%)
ASEAN+3	1,920(17.6%)	2,589(19.9%)	5,872(20.9%)
NAFTA	2,297(21.0%)	2,850(22.0%)	4,557(16.2%)
EU	4,074(37.3%)	4,468(34.4%)	10,883(38.7%)
세계	10,921(100%)	12,980(100%)	28,109(100%)

(단위=십억 달러)

자료=세계은행, WTO, IMF

(표1.1) 주요 권역 별 교역 규모와 세계 비중

한국, 중국, 일본은 동아시아를 넘어 전체 세계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거대 시장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 3국에 존재하며, 상호 간 엄청난 양의 교역을 진행하고 있다(표1.2).

구분	한국, 중국		한국, 일본		중국, 일본	
	한→중	중→한	한→일	일→한	중→일	일→중
수출	1,342	864	397	683	1,473	1,944
투자	48.8	6.5	4.2	22.9	1.1	126.5

(단위=억 달러)

자료: KITA, 중국해관총서, 일본무역진흥회(JETRO),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표1.2) 2011년 한, 중, 일 3국간 교역-투자 현황

¹ 김경원, <<대한민국 경제 2013 그 이후>>. (2012), p.202

²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2009, p.103

³ . 와다하루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2003), p.146

⁴ 1990년대 초 멕시코 위기와 2010년 EURO존의 위기로 볼 때, 고르지 못한 경제 규모의 국가들이 경제적 통합을 이룰 경우, 투기 자본에 의한 경제 위기와 필요한 상황에서 각 국가가 원하는 방향의 통화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멕시코 금융의 외국의존성이 심화된 것은 NAFTA 발효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신현중, <멕시코 경제위기의 교훈>, 한국무역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문, (1997). 신관호, <'유로존 위기' 원인을 보는 두 견해>, (조선일보 칼럼), (2010.06.12).

⁵ 경제 체제 면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 통합의 측면에서, 홍콩을 독립된 지위의 국가로 참여시키는 데에는 우리가 따른다.

⁶ 2008년 마잉주 대만 총리 취임 이후, 중국과 59년만에 통상·통신·통항 3통 실시에 합의했고 실행에 들어갔다. 그 후 중-대만 교역량은 크게 증폭돼 연간 1300억 달러에 달하고, 중국에 진출한 대만 상공인은 100만 명에 이른다. 대만인들이 1990년대 이후 중국에 투자한 돈은 1500억 달러를 상회한다. 현재, 대만은 중국과 다른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보다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자 한다.

또한 한중일 3국은 복잡한 역사관계로 얽혀있다.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의 야욕으로 인해 한국은 36년 동안 치욕의 역사를 감당해야 했고, 중국은 1894년 청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을 치르며 일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아직 완벽히 씻어내지 못했다.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은 20세기 피와 고통의 역사적 현장이었다. 과거의 패권 쟁탈의 잔재인 독도/다케시마 문제, 조어도/센카쿠 열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문제라는 공통적 정체성을 제시한다.

러시아를 유라시아-환동해 공동체의 회원국으로 받아드려야 하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역시 한중일 3국과 역사적 이해관계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 1857년 시작된 러시아의 극동지역 진출로 한, 중, 일 3국과 끊임없는 긴장, 갈등 관계를 만들어왔다.⁷ 또 일본과 1904년 러일 전쟁을 치러왔고, 쿠릴열도를 대표로 하는 4개 도서에 대한 영토문제를 안고 있다.⁸ 이에 러시아와 일본 양국은 관계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2차 대전 이후 평화조약도 맺지 않은 상태이다.⁹ 둘째,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는 동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토의 70%가 동북아시아의 북아시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이 러시아 전역에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문화는 다소 다르지만, 아시아적인 공통 분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의 경제 성장에 더욱 활력을 불어줄 동력이다.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Far East, 極東)만이 한국, 중국, 일본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처가 될 수 있다.¹⁰ 여전히 개발되지 않은 시베리아 자원의 보고는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요컨대, 우리 SONAS10은 경제적 규모에서 유사하고, 과거 100년의 역사를 뒤돌아 볼 때,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인 동북아시아 지역의 4개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유라시아-환동해 공동체의 회원국으로 제안한다. 강조하자면, 공동체를 통해 얽혀 있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장을 만들어 가는 것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의 주된 목표로 한다.

2. 유라시아-환동해 공동체의 구조

SONAS10이 주장하는 연합의 구조는 업무의 유기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유라시아-환동해 공동체는 연합이라는 큰 틀 안에 네트워크 식의 여러 부서가 같은 위상으로 상호 연결된 구조가 되어야 한다.¹¹ 즉, 연합 내 경제 통합과 각종 프로젝트를 시행할 경제부, 역내 문화적 통합을 위해 문화 교류를 지원할 문화부를 창설해야 한다. 또 경제 개발에 치우쳐 놓칠 수 있는 환경문제를 다룰 환경부, 역내 빈부격차, 재난, 빈민구제에 힘쓸 복지부가 필요하다. 더불어, 앞서 연합의 장애물이자 기회인 역사적 문제를 해결할 독립적 성격의 역사위원회의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분기별로 각국의 대표자들이 모여, 연합의 전체적인 정책의 틀과 지향해야 할 가치의 방향을 정할 대회의체 구성을 주장한다.

언급한 5개의 부서는 상호 연동하여 연합 내 프로젝트 추진 시, 서로 협동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부의 주도로 시베리아 극동 지역의 자원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환경부는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¹²를 실시하여,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이 더 클 때,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재난 발생 시, 복지부는 경제부에 재난 지역에 국한적으로 자유 시장 경제를 중지하고, 복구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요컨대, SONAS10은 연합이 명령 하달 식의 상하 구조가 아닌 평면 구조로 상호 협력, 견제를 강화한 네트워크 식 구조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그림2.1).

⁷ 말로제모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지식산업사, (2002)

⁸ 와다하루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2003), p.98

⁹ <Япония готова к теплым отношениям с Россией>, (Известия), (2011.06.11)
http://izvestia.ru/news/493734

¹⁰ 러시아의 동부지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지리적 인접성이 있는 데다 생산요소 및 산업구조간 이상적 형태의 상호보완성까지 갖추고 있어 동북아 역내 경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영, 이철원, 신현준, V. D. Kalashnikov,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06-13, (2006), p. 23

¹¹ 네트워크 조직 하에서, 구조와 구성원은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상호 책임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개발할 수 있다. David Skyrme, <The Networked Organization>, (2011).

¹²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개발 행위에 있어 계획된 대상 사업에 의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UNEP, <Goals and Principl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008).



(그림2.1) 연합의 5축 네트워크 형 구조.

각 부처는 공동체의 구성국인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구성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역외 국가들의 보다 전문화된 기술이나 제도를 들여오기 위해서, 역외에서 초빙한 자문위원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민감한 사항을 다룰 역사위원회는 철저히 중립을 지킬 회원국의 학자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민족주의적 전문가들이 깊게 관여할 경우, 각종 로비와 정치적 암투로 연합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³

유라시아-환동해 공동체 내 4부처와 역사 위원회 그리고 대회의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동북아시아를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경제적 통합을 담당할 경제부이다. 경제부에서 목표로 하는 경제 통합의 정도는 EU의 EURO존과 같이, 화폐를 공유하는 단계의 경제 통합 이전의 단계로서의 통합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먼델(Robert Mundell)교수의 최적통화지역 이론¹⁴에 따르면, NEAU를 같은 화폐를 공유하는 최적통화지역(Optimal currency area)으로 적합하지 않다. 우선, 역내 국가 간의 경제 연관성이 높고, 산업이 다변화되어 있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유사한 경제 구조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조건은 만족시키기 어렵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 체제이며, 환율 제도 또한 다른 3국과는 다르게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4개국의 언어가 각기 달라 노동의 이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경제부는 각 국가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다르게 유지하는 틀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통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간의 자본과 노동 그리고 필요한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공히 고용분야에서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위주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¹⁵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중국으로 별다른 장애물 없이 넘어가 경제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 러시아 극동 지역에 개발되지 않은 엄청난 양의 자원¹⁶을 4개국 경제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유인해야 한다.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은 넘쳐나는 자원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더

¹³ 첫째로, 일본은 이미 해방 직후, 독도 영유권에 대해 미국과의 로비를 통해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러스크 서한'을 이끌어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 종합연구소, <<대한민국 독도: 일본논리의 종언>>, 책문, (2010). 둘째로, 중국과 한국의 극우화된 민족주의 사상은 각국 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 우실하, <<동북공정의 선행 작업들과 중국의 국가 전략>>, 울력, (2004), Denisov V. И., < Денисов В. И. Место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и его актуальность в российск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 Россия и Корея: Проблемы улуч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и государст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РАН,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008), pp.16-19.

¹⁴ 최적통화지역 이론에서, 원활하게 한 권역 내에서 동일 통화가 통용되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각국의 경제구조가 유사할 것, 2)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이동이 자유로울 것, 3)역내 국가들 간 경제연관성이 높을 것 4)역내 각국의 산업구조가 다변화돼 있을 것, James Gerber, <<James Gerber's International Economics fifth edition>>, Pearson, (2010), p. 237-240.

¹⁵ 오영석 외, <한, 중, 일 국제분업구조 분석과 협력 증진방안>, KIET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2010-583, (2010.12.19).

¹⁶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채굴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잠재 규모는 석탄(200억 톤 이상), 석유(96억 톤), 천연가스(14조 입방미터), 윤성학, 토론회[동북아 메가 개발프로젝트와 한국의 선택] 발표문, (2008.09.08) http://www.goodforum.org/bbs/view.php?id=issu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name&desc=desc&no=53&PHPSESSID=bb6bbea3cdf375ca60a4f3a84d2.

단 개발과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¹⁷ 이에 동북아 연합체의 노동력과 자본이 이곳을 개발해 사용한다면 러시아 정부와 나머지 3개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될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명실상부한 단일 경제권으로 묶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내에서 가능한 모든 무역 장벽 철폐를 추구해야 한다.¹⁸ 즉, 각 국가별 FTA수준에 상응하는 역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쿼터제 폐지, 수출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연합의 3개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유치산업보호를 위해 역외 국가들 간의 무역에선, 비교열위 산업에 대해 무역 장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¹⁹ 연합 경제부는 위의 사항에 대한 합의문을 제공하고, 관리,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4개국 정부를 대표하여 역외 국가 또는 연합공동체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위에서 언급한 경제부의 업무가 금융부문과 관련된 것이라면, 실물경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연합 경제부가 다음의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시베리아횡단철도(TSR)과 한반도중단철도(TSR)의 연결 사업이 필요하다. 두 철도 연결로 표면적으로 동아시아의 끝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상교통로의 탄생으로 교역량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²⁰ 더불어 그 이면에는 동북아시아의 화약고인 동북아 평화라는 이점이 숨어 있다. TSR과 TKR이 연결되기 위해선 반드시 북한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협력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북한과 공유함으로써²¹, 북한의 경제 발전을 꾀하고, 세계 평화로 나아오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는, 부수적으로, 동북아시아가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인식을 불러와,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²² 더불어, 중국횡단철도까지 완전히 연결된다면, 철도, 항공, 해운의 3중 복합 운송체계가 확립되어 연합 내의 물류 이동이 더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부의 역할은 각 국민들로 하여금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4개국의 상호이해도를 높이고,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역내 관광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 동안 중국인 복수사증 대상 확대 및 수학 여행단 무비자 입국 허용(2007.4.1)과 한일 간 90일 이내 체류 시 비자 면제(2006.3)는 동북아시아 역내 관광 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²³ 앞으로 EU처럼 관광대국이 되기 위하여, 관광비자 면제는 필수적이다. 또한, 연합경제부와 협력하여 역내 관광객들이 자유로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국 간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더불어, 대학생들을 뽑아 각 국에 파견하여, 서로를 익히고, 그들이 다시 본국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교환학생 제도를 장려하고, 장학금 등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상호 국가에 대한 호감을 심어 주기 위해, 공연 예술단의 순회공연을 늘리는 방안 또한 실효성이 있다.²⁴

환경부의 설립을 제안하는 이유는 과거의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성장

¹⁷ 1990년대 초 러시아가 급진적인 시장경제체제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에 대한 특별한 경제정책의 실행을 거부하면서 동 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재영, 이철원, 신현준, V. D. Kalashnikov,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06-13, (2006), p. 35, 인구감소는 러시아연방 전체의 문제지만, 극동지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2003년 극동지역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마이너스 3.1%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1.3배 높았다. 위 논문, p. 59.

¹⁸ 최원목, <거대경제권 통합으로 향하는 세계>, (조선일보, 사외칼럼기고), (2012.09.2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5/2012092503250.html

¹⁹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큰 3대 시장경제는 모두 무역장벽의 보호 하에서 산업화를 시작했다. Paul R. Krugman, <<국제경제학 제8판>>, 시그마프레스, (2009), p.284.

²⁰ 김원배,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 : 한-중 육상교통 연계를 중심으로>, KERI한국경제연구원단행본,(2001), p.15.

²¹ 루코(주)의 사업계획에 근거한 사업타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SOC투자과 운송사업기반조성에 소요되는 2,100억원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나진-합산 프로젝트' 투자안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원용, <한국과 러시아 철도, 에너지협력>, (유라시아연구사업단), 2010.

²² '북한의 추가도발 등 안보리스크가 더 고조될 경우, 사업조정을 할 생각인가?'라는 물음에 41.7%의 기업은 '사업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답했고, 사업조정 내용으로는 '투자유보'(49.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사업장 축소'(33.0%)와 '사업장 철수'(17.4%)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북한리스크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식' 조사, (2010), 조사대상 :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600개사 대상.

²³ 이병욱, <한중일 역내 관광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대국의 길 열어야>, (KERI), 2009

²⁴ 이케가미 준, 우에키 히로시, 후쿠하라 요시하루, <<문화경제학>>, 나남출판, 1998, p.249.

²⁵의 패러다임을 동북아 연합의 기지로 삼자는 의미에서이다. 92년 리우데자네이루 선언을 시작으로, 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은 더 이상 세계의 흐름이 반환경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동북아 연합은 2008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중국, 5위 러시아, 6위 일본, 11위 한국을 포함하고 있어²⁶,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경제부의 개발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탄소배출권제도 상용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의 서부 지역은 유라시아판의 지각변동으로 잦은 지진을 겪는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시점에 난민 발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동북아 연합체 차원에서 이를 도울 기관이 필요하다. 천지재해로 인한 난민은 일시적이고, 예측 가능하지 않으므로, 난민 지원 이외에도, 각 국가들의 빈민, 보건 의료 활동까지 복지부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복지부의 가장 큰 가치는 인권이며, 조직의 모델로, 유니세프(UNICEF)나 세계은행(World Bank)의 모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철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지원으로 현재 제 3세계에 불어 닥친 이른바 ‘처치 곤란한 힌코끼리²⁷’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경제부와 협력하여, 우선적인 지역 발전 전략을 짜는 데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

역사위원회에는 철저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현재 동북아의 긴장 기류는 역사 문제에서 기인한 국민 정서와 영토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²⁸ 따라서, 대화를 통해 역사 왜곡, 서로 간의 오해를 푸는 길이야 말로, 동북아 화해 공동체 설립에 부합하는 목표라고 부를 수 있다.²⁹ 이를 위한 역사위원회는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역사 교과서를 펴내는 중심기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 학자들의 지속적인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또, 문화부와 협력하여 역내 문화재를 지정하고, 보존 가치를 지닌 유물을 모아 박물관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대회의체는 언급한 모든 부처 및 위원회를 연결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다. 회의는 분기별로 각국 대표가 모여 진행되고, 이 회의의 의장이 대외적으로 유라시아-환동해 공동체의 대표역할을 한다. 의장은 국가별로 대표자가 돌아가면서 맡고, 회의체는 의장의 사안이 정책 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의장을 적절히 견제해야 한다. 회의체는 철저한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작동하며, 인권, 환경, 경제 발전, 갈등 해결 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3. 유라시아-환동해 공동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유라시아-환동해 공동체의 실현은 어쩌면 운명적이고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세계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계모니에서 유럽, 중국을 대표로 한 아시아 등으로 퍼지는 다극 체계모니로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다.³⁰ 세계의 힘의 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위기, 2010년 유럽 발 유럽 재정 위기가 연타로 터졌다. 전 세계는 글로벌 위기가 가져온 경제 침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이를 극복할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여전히 동분서주하다.

미국은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3차 양적완화정책까지(Quantity Easing)까지 시행했으나, 무분별한 달러의 발행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만을 낳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³¹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새로운 질서를 마

²⁵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의미한다. 김임순, <<저탄소녹색성장: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북스힐, (2010), p.23.

²⁶ Nations Statistics Divisio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Carbon dioxide emissions (CO₂), thousand metric tonnes of CO₂, <http://mdgs.un.org/unsd/mdg/SeriesDetail.aspx?srid=749&crd=>

²⁷ 동남아에서 힌코끼리는 왕권의 정당성과 위엄을 상징하기에 일을 시킬 수 없다. 이에 착안하여 세계은행이나 다국적 기업의 지원으로 걸보기엔 번드레하나 유지에 어려움이 따르는 프로젝트나 시설물을 지칭.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은 많은 23가지>>, 부키, (2010)

²⁸ <동북아 민족주의 정서 폭발 불러온 영토 분쟁>, (조선일보, 사외칼럼기고), (2012.09.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6/2012091601412.html

²⁹ <韓美 "뜨거운 동북아 정세, 대화 통해 온도 낮춰야">, (아시아경제), (2012.10.16),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2012101616062231252&sec=sisa1>

³⁰ 다보스포트, <<힘의 이동>>.2007

³¹ <미 3차 양적완화 '역풍'...물가상승 우려 커진다>, <한겨레>, (2012.09.18),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552253.html>

려해야 할 시대적 결정을 앞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라시아-환동해 공동체의 건설은 새로운 블루오션의 길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답을 제시한다.

유라시아 환동해 공동체의 실현을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3가지로 첫째, 4국 간 아슬아슬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성장과 발전으로 비유되는 '렉서스'를 위해서 협력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4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정체성과 이해관계로 비유되는 '올리브나무'의 뿌리는 복잡하게 엉켜있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현주소다. 이를 위해서는 바른 역사적 인식이 필요하다. 독일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럽연합(EU)유로존 단일통화동맹 등을 통해 정치·경제·문화적으로 통합의 길을 걸어왔다.³² 공동체로서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전에 일본의 적극적인 역사 바로잡기는 유라시아 환동해 공동체 실현을 위한 선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세계의 화약고이기도 한 북한의 협력 여부가 관건이다. 대륙과 해양의 기운을 이을 수 있는 한반도의 맥이 끊어진 것도 한국 전쟁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다. 아직까지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독재가 이어져오고 있으며,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위험 1순위 국가이다. 허나 북한의 핵과 관련된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즉, 북한은 현재 극심한 빈곤상태에 처해있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위해 핵 문제로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³³ 따라서, 유라시아 환동해 공동체의 앞서 언급한 북방열차 건설 사업으로 북한과 협력을 맺어나간다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로 자연스럽게 불러내어 세계 평화와 번영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

셋째, 기존의 헤게모니를 유지해왔던 미국의 반발이다. 미국은 냉전시대 이후로 세계 안보 우산 역할을 하며, 자유 경제 질서를 정립하는 헤게모니 안정 장치 역할을 해왔다.³⁴ 하지만, 중국의 급부상으로 팍스 아메리카 사회의 붕괴를 두려워하며, 어떻게 힘의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유라시아-환동해 공동체에 미국의 포함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과거 냉전시대의 또 다른 축이었던 소련의 중심국가인 러시아와 동북아 3국이 협력체제를 가져가고자 할 경우, 미국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라시아-환동해 공동체의 최상의 목표는 힘의 이동을 통해 힘을 장악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환동해 해상권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침체된 경기를 부흥시키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더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과 유럽을 잇고, 환동해 해상권을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기존의 APEC 국가들과 협력하여 환태평양 해상권을 이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외교를 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키워와야 하고, 중립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을 때, 유라시아-환동해 공동체의 청사진은 더욱 밝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조선대학교동아시아경제연구소, <<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경제성장1>>, 2008
2. 박번순, <<하나의 동아시아>>, 삼성경제연구소, 2010
3. 말로제모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지식산업사, (2002)
4. 문정인, 김명섭,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5. 와다 하루끼,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2004
6. 신현종, <멕시코 경제위기의 교훈>, 한국무역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문, (1997).
7. 신관호, <'유로존 위기' 원인을 보는 두 견해>, (조선일보 칼럼), (2010.06.12).
8. David Skyrme, "The Networked Organization", 2011.
9. UNEP, <Goals and Principl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008).
10.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 종합연구소, <<대한민국 독도: 일본논리의 종언>>, 책문, (2010).
11. Денисов В. И., (Денисов В. И. Место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и его актуальность в

³² <日브란트 총리의 '참회의 눈물'배워야, <연합뉴스>, (2012.09.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844958>

³³ A.A.Немов, (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в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НДР // Россия и Корея: Проблемы улуч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и государст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РАН,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008)

³⁴ G.John Ikenberry and Cung-in Moon,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2007, p.1

- российск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РАН,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008)
12. James Gerber, *James Gerber's International Economics fifth edition*, (Pearson, 2010)
 13. 오영석 외, <한, 중, 일 국제분업구조 분석과 협력 증진방안>, KIET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583, (2010.12.19).
 14. 윤성학, 토론회[동북아 메가 개발프로젝트와 한국의 선택] 발표문, (2008.09.08)
http://www.goodforum.org/bbs/view.php?id=issu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name&desc=desc&no=53&PHPSESSID=bb6bbea3cdf375ca60a4f3a84d2.
 15. 이재영, 이철원, 신현준, V. D. Kalashnikov,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 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06-13, (2006)
 16. 최원목, <거대경제권 통합으로 향하는 세계>, (조선일보, 사외칼럼기고), (2012.09.2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5/2012092503250.html
 17. Paul R. Krugman, <<국제경제학 제8판>>, 시그마프레스, (2009)
 18. 김원배,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 한-중 육상교통 연계를 중심으로>, KERI한국경제연구원단행본,(2001)
 19. 성원용, <한국과 러시아 철도, 에너지협력>, (유라시아연구사업단), 2010.
 20.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북한리스크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식' 조사, (2010)
 21. 이병욱, <한중일 역내 관광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대국의 길 열어야>, (KERI), 2009
 22. 이케가미 준, 우에키 히로시, 후쿠하라 요시하루, <<문화경제학>>, 나남출판, 1998
 23. 김임순, <<저탄소녹색성장: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북스힐, 2010.
 24. Nations Statistics Divisio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Carbon dioxide emissions (CO2), thousand metric tonnes of CO2,
<http://mdgs.un.org/unsd/mdg/SeriesDetail.aspx?srid=749&crd=>
 25.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부키, 2010.
 26. <Япония готова к теплым отношениям с Россией>, (Известия), (2011.06.11)
<http://izvestia.ru/news/493734>
 27. <동북아 민족주의 정서 폭발 불러온 영토 분쟁>,(조선일보, 사외칼럼기고), (2012.09.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6/2012091601412.html
 28. <韓美 "뜨거운 동북아 정세, 대화 통해 온도 낮춰야">, (아시아경제), (2012.10.16),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01616062231252&sec=sisa1>
 29. < 저무는 팍스 아메리카나 ... 韓·中·일이 이어간다>, (매일경제), (2009.05.07),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266736>
 30. 최병일 외 2명, <한, 중 FTA협상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KERI), 2012.
 31. University of Sheffield.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Political and economic trends and issues>>,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1990
 32. John G. Ikenberry, Chung-in Moon,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debates, issues, and new order>>, Rowman & Littlefield, 2008
 33. 김경원 외 1명, <<대한민국 경제 2013 그 이후>>, 리더스북, 2012.
 34.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한울아카데미, 2009
 35. 다보스포럼, <<힘의이동>>,매일경제신문사, 2007
 36. 마잉주 , <양안 법규 수정해 양안 교류 확대할 것 > 人民日报, (2012.10.12)
<http://kr.people.com.cn/203072/7974392.html>
 37. <마잉주 총통리가 남북한에 주는 교훈>, <일요서울>, (2012.02.01)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33>
 38. A.A.Немов, (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в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НДР), РАН,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008)
 39. <日브란트 총리의 '참회의 눈물'배워야, <연합뉴스>, (2012.09.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844958>
 40. <미 3차 양적완화 '역풍'...물가상승 우려 커진다>, <한겨레>,(2012.09.18),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552253.html>